

1925~1931년 米價하락과 부채불황

김 재 훈*

본 연구는 식민지 산업정책(산미증식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그 중간과정에 있는 시장기구의 작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1929년 세계공황 이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미 1925년 이래 쌀값 등 농산물가격 하락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920년대 일본으로의 쌀수출이 급증해서 쌀시장이 통합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불황과 식생활 서구화에 따라 쌀수요가 위축되었다. 반면, 일제의 강압적인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쌀생산량이 늘어났다. ‘공정혁신’에 의한 생산량 증대가 시장가격을 하락시킨 것이다. 부채를 통한 수리사업정책은 쌀값 하락국면에서 부채불황을 낳았다. 쌀값하락을 통한 이러한 시장의 강제는 ‘동태적 지주’의 출현과 농민층의 양극분해를 강제하였다. 부채상환을 위한 화폐수요 증대가 생산량 증가 이상으로 쌀의 시장판매량을 증가시켰는데, 이 때 실물화폐로서의 쌀의 역할을 법정화폐가 대체하면서 쌀의 시장가치 하락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생산과정으로부터 금융교란이 발생해 가는 구조를 볼 수 있다.

핵심주제어: 녹색혁명, 산미증식계획, 공정혁신, 부채불황, 금융교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3, L7, N1

I. 머 리 말

일제가 일본의 부족한 쌀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쌀단작화를 적극 추진한 것, 그 목적을 위해 수리사업, 즉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종래에는 주로 식민지정책과 그 결과를 직접 연관시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일제의 ‘朝鮮産米増殖計劃’이 일본에서의 쌀수급과 조선 민중의 쌀소비량에 미친 영향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되었다. 그래서 1920년 이후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생산의 증가속도를 능가하는 조선미 이출증가속도, 특히 일본 국내의 쌀값이 폭락한 시기에도 둔화되기는커녕 더욱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E-mail: jaehk@daegu.ac.kr

논문투고일: 2005. 4. 15 수정일: 2005. 8. 29 게재확정일: 2005. 10. 6

가속화해 간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준보(1977)에서 “日本米價를 떠난 植民地 産米 移出의 독자적 持續性”이라 불렀던, 이른바 ‘공급의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① 1920년 이후 산미증식계획 실시에 의한 식민지미 대량증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관점, ② 일본 국내에서의 쌀값지지정책 강화가 식민지에 대해 증산자극적으로 작용해서 식민지미 이출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견해(暉峻衆三, 1984, p. 196), ③ 생산미의 반봉건적 분배구조와 유통의 식민지 종속구조, 즉 분배단계에서는 지주에게, 가공단계에서는 대규모 정곡업자에게, 그리고 유통의 최종 단계에서는 개항지의 대규모 이출상에게 집중된 분배 및 유통 메커니즘 때문이었다는 관점(大川一司·東畑精一, 1939; 전강수, 1989) 등이 있었다.

물론 일제 말기 전시경제를 강화하면서 공출과 배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정책과 식민지 농민의 경제적 피해가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시장경제체제였던 만큼 정책과 정책결과를 매개짓는 시장변동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대해 그 매개과정으로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의문을 품고, 시장에서의 쌀값변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분석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농업공황을 1929~1930년의 세계대공황에 따른 파생적 부분으로서 파악하는 데 대해 본 연구에서는 쌀값이 이미 1925년부터 급격히 하락해 갔음에 주목한다. 농업공황은 공업부문에서의 전반적 과잉생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기계적인 관점에 대해, 당시 인구의 80%가 농업인구이던 경제상황 속에서 농산물, 특히 쌀로부터 야기된 디플레이션이 식민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즉, 농업부문에서 진행된 ‘부문공황’의 관점에서 이 시기 쌀값의 하락을 파악하려는 것이다.¹⁾

농업공황을 1929~1930년의 세계대공황에 따른 파생적인 부분으로 파악할 경우 그 공황의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금융교란과의 관련성이 주된 쟁점이었다. J. K. 갤브레이스(1954), M. 프리드먼과 A. J. 슈바르츠(1963), C. P. 킨들버거(1978)는 금융교란에 대한 분석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에 비해 민스키(1982)는 금융교란과 불황(depression)을 결합시켜 분석

1) 농업부문은 공업화가 진행되기 전 태양혹점설로 경기변동이 설명되기까지를 제외하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체로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한 경제 전반의 공황으로부터 파생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경기변동에 반대방향(counter-cyclical)으로 움직여서 경제변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후자의 부분에 관한 신고전학파적 분석으로는 J. Rocha and D. Restuccia(2002)를 참조할 수 있다. ‘부문공황’에 관해서는 김재훈(1993)을 참조하라.

하고자 해서, 대공황이 부채불황(debt deflation),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고유한 금융불안의 극단적 형태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보았다.

그런데 1929~1930년이 아닌 1920년대의 농산물가격 하락을 주목할 경우, 우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금융긴축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리드먼과 슈바르츠(1963, pp. 205~239)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부채 조달을 위해 1919년까지 이자율을 낮게,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다가 1919년 12월부터 1920년 들어 이자율을 인상해 갔다는 것에 주목한다. 본원통화와 M2공급은 1920년 10월~1922년 가을에 정점을 이루고는 그 다음 급격히 감소해 가서 1867년 이래 최단 기간에 최대의 감소기록을 보였다는 것이다.²⁾

우리 나라에서도 차명수(1991, p. 71)는 동일한 관점에서 서 있다. 선진 각국들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에서 진행된 금본위제 복귀를 위한 디플레이션정책이 1920년대 내내 누적되어 1929년 세계적 규모의 공황돌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디플레이션정책을 통해 전전 화폐가치 유지를 꾀하였고, 독일은 1923년, 프랑스는 1928년 금본위제로 복귀해서 대외균형 회복을 위한 국내경제 위축이 1920년대에 계속되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긴축정책이 세계경제 전반의 총수요를 위축시켰는데, 과점적인 공산품에 비해 경쟁시장인 농산물시장의 가격하락이 더 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개발국의 1차 상품 수출액은 정체 내지 오히려 감소해 갔는데, 특히 저개발국들은 1925년부터 1차 상품 가격하락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에 따른 종속변수로만 조선 및 일본에서의 미가하락과 불황이 고려되었을 뿐, 그것을 외부환경으로 하면서도 그 내부의 구조·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윌슨(1948, pp. 93~114)은 좀더 케인지언적이다. 정부예산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것이 상품 순수출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고, 긴축적 통화정책은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에 비해 고든(1974, pp. 17~23)은 금융요인과 재정요인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전후 물가상승과 매출감소를 기업구매 억제요인으로, 또 고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을 다른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수요쪽의 정책 측면에서 농산물가격 하락요인을 찾았다는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의 연장에서 1929~1933년에 관한 Peter Temin의 논점을 이 시기에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과거 페리티에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이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또 위험스럽게 된 과거의 정책처방에 경직적이고 맹목적으로 집착함으로써 불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는 논점이다. R. Sylla(1991) 참조.

반면, J.R. 버넌(1991)은 수요쪽 요인과 더불어 공급쪽 요인을 함께 보았다. 그는 우선 1920~1921년 GNP 디플레이터 연간 하락이 18%, 13.0%, 14.8%이어서 과거 120년 중 가장 심하였고, 대공황 3년차인 1931~1932년간 11.5%보다 더 심했는데, 이러한 물가하락은 동반한 실물생산의 하락폭에 비해 더 컸음을 주목한다. 그 하락의 정도가 3년간 각각 2.6배, 3.7배, 6.3배였다(가령 1929~1930년간 GNP 디플레이터 하락폭은 2.7%였는데 비해 실질GNP 하락은 9.4%이어서, 3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전반적 물가하락을 야기한 주된 요인을 군병력의 민간 복귀, 이민노동자 증가 등 1920년에 있었던 민간노동력의 급증이 아니라 농산물가격 하락에서 찾았다. 농산물가격 변동을 공업의 파생변수로 본 것이 아니라 설명변수로 본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격 변동의 원인은 위에서 본 수요쪽 요인과 더불어 공급쪽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농산물 공급이 다른 국내생산보다 더 가격 비탄력적인 데다가 클라인(1975)이 제시한 가격기대이론이 1920~1921년 상황에 어울린다고 보았다. 금본위제하에서 물가는 화폐에, 화폐는 금에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의 큰 가격변동은 반드시 역전되기 마련이라 생각했다. 과거 주요 전쟁은 항상 상당한 인플레이션과 그 뒤 급격한 디플레이션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20년 총수요가 감소했을 때, 가격하락은 악화되어 갔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농업공급의 특성상 총생산 감소는 그만큼 일어나지 않아서 큰 폭의 농산물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 경제 내부의 구조에 대해 이와 같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전반을 주목하는 관점에 서고자 한다. 당시 일제의 통화량 변동을 통한 디플레정책을 살펴보고, 당시 세계 선진 각국의 디플레이션정책이 일본에서,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실시되었음을 보는 한편(제II절), 당시 우리 나라 농업의 공급측 요인에도 주목한다.³⁾ 생산력 혁신을 슈페터의 혁신이론에 따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나누어 볼 때 농업부문에서 진행된 녹색혁명은 공정혁신에 해당하고, 그 결과 공급증가가 진행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의 특성상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⁴⁾ 그런데 당시 쌀값하락은 쌀생산 증가보

3) 이 경우 Vernon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공급쪽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았으나 당시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되어, 특히 1919년 어느 때인가는 거의 파업중이었으나, 일단 전쟁이 끝나자 노동자들의 지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생산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따라서 노동운동이 그럴 정도로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노사관계는 아직 변수로 작용할 수 없었다.

4) 1925~1930년간의 쌀생산 증가에 관해서는 과거의 일제하 농업생산통계에 따른 해석들이

다 더 컸었는데, 그 요인이 설명되어야 한다. 요컨대, 농민들이 쌀생산 증가량 이상의 쌀을 시장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은 수리사업을 통한 당시 쌀증산정책이 해당 농가에 막대한 부채부담과 함께 진행된 것, 쌀가격하락은 농민의 총수입에 영향을 미쳐 부채부담을 더 크게 한다는 것, 그래서 부채상환을 위한 화폐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 그럴 때에 당시 교환경제에서 아직 상당부분 실물화폐로서 기능하였던 쌀의 시장가치 하락을 목격한 농민들이 쌀보유량을 줄여 가면서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누적적 과정을 분석한다(제Ⅲ절).

끝으로 그러한 쌀값하락이 산업에 끼친 영향도 살펴본다. 이 경우 농산물가격 하락이 조선 내 상대가격체계를 크게 바꾸어 그 이후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 차명수(1991)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 내부에 미친 영향에 집중하고, 그 때 농산물가격 하락이 지주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힌다(제Ⅳ절).⁵⁾

결국 본 연구는 부채불황이 진행될 경우 금융교란과 불황을 결합시키는 민스키(1982), 피셔(1933)가 주목한 금융교란은 산업생산의 구조적 결함과 결합될 때에 비로소 현실의 불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을 논증하게 된다(결론). 그 시대를 지나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세계경제의 전 지구화(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의 독자적 운동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 금융부문과 산업생산 간 상호작용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

있고, 박섭(1996)에 의한 수정통계가 있다. 기존의 농업생산통계를 따를 경우 1920년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 실시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즉 미곡생산성의 정체가 문제로 되며, 그 원인에 관해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있다.

① 1920년대 있었던 전반적인 쌀값하락이 농민의 증산의욕을 감퇴시켰고, 그것이 정체의 배경이 되었다는 J. Sidney(1984, p. 34), ② 일본이 산미증식계획 기간중에 보급한 일본식 농법인 개량농법 자체의 한계, 즉 개량농법은 한국의 풍토에 맞지 않아 도입 초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지만, 1920년대 초부터 생산력 기반을 잠식함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全錫淡·崔潤奎(1978, pp. 201~206), 정문중(1984), 장시원 외(1988), 박영구(1991), ③ Yujiro Hayami(速水又次郎)의 견해를 이어받아 벼개량품종의 지역적 보급상황의 차이에 주목한 우대형(1994, 1998) 등이 있다.

그러나 1936년 쌀생산에 대한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라 쌀생산량이 394만여 석 오차가 생기고, 특히 그 해가 드물게 보는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0만 석 증산을 보았다고 해석해야 하는 오차는 문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섭(1996)에 의한 수정통계를 채택하고, 그 경우 1920년대의 녹색혁명이 우선 당시 조선 내 쌀값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5)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중심 논지는 아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기존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된 불황이 산업생산에 관여하는 각 계급에 상이한 파괴력을 갖고 진행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제Ⅳ절).

는 것이 중요하며, 그 구조를 역사 속에서—일제하 1920년대 후반 불황의 진행 속에서—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II. 쌀시장에서 수요의 구조와 변동

대체로 1920년대 쌀의 가격변동은 세계농산물가격의 하락과 같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차명수(1991)도 그러하다.⁶⁾ 그러나 1920년대 세계적으로 쌀은 산지가 아시아 중에도 일본, 조선, 대만, 중국, 태국, 인도차이나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일본, 조선, 대만지방에서는 여타 지역에서의 長粒形과는 달리 短粒形의 쌀이 주로 생산·소비되었다. 즉, 자포니카계열의 쌀은 공급과 수요의 범위가 좁은 특성을 가졌다. 다음을 참고하자(소비자의 입장에서 는 쌀품종의 차이를 품질의 차이로 느끼게 된다).

“쌀은 아시아 중에도 일본, 조선, 대만, 중국, 태국, 인도차이나에 산지가 국한 ……이 중에서도 일본, 조선, 대만의 것은 품질이 우량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것은 품질이 나빠서 ……즉 공급과 수요의 범위가 좁다.”⁷⁾

그래서 1928년 일본 쌀수입 금지(embargo)도 세계미곡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⁸⁾ 또 밀과 쌀소비의 대체관계도 거의 없어서 서로 가격의 영향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다(D. Rothermund, pp. 38~42).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대만의 쌀값폭락은 순전히 이 지역에서의 쌀시장 변동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6) 1925~1931년간 60%에 이르는 쌀값폭락이 일본 쌀값변동과 거의 일치했고, 이런 조선과 일본의 쌀값변동은 국제쌀가격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쌀값의 이러한 변동은 국제밀가격 변동과, 조선에서 쌀과 긴밀한 대체재 관계에 있는 보리, 밀, 콩과 같은 잡곡가격 변동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 변동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은 그 세계농업공황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판단한다(차명수, 1991, pp. 73~74).

7) 朝鮮農會, 『朝鮮農會報』(1929. 12), p. 8.

8) 당시 조선과 대만은 일본 제국주의 국내시장에 편입되어 있었고, 세계미곡시장과는 일본 시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9) 제1차 세계대전 기간중에 일본에서의 쌀값상승에 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에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타지역 수출감소, 국제금융시장의 마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쌀값의 상승은 그러한 세계적 영향이 적었고 생사수출 확대와 농촌 면직물공업의 발전을 매개로 농촌경제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진행된, 우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武田晴人, 1983, p. 333).

〈표 1〉 농업생산 변동 추세

연도	쌀수확량 (千石)	벼시세 (중급: 圓)	쌀재배면적 (千町)	단보당 수확량(석)	농가호수 (천 호)	호당 수확량 (석)
1911	11,869	5.60	1,399	0.848	2,380	4.97
1916	13,392	5.10	1,519	0.881	2,641	5.07
1920	14,409	16.23	1,555	0.927	2,720	5.29
1925	15,594	19.26	1,585	0.984	2,743	5.68
1930	21,834	10.14	1,662	1.314	2,870	7.61
1931	18,326	6.61	1,675	1.094	2,882	6.36
1936	19,411	12.99	1,601	1.212	3,059	6.35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박섭(1996).

따라서 당시 조선 쌀시장에서 수요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 내부의 수요변동요인과 일본에서의 수요변동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쌀의 수출은 1925년까지는 2배 정도, 1926년 이후는 3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 가서 조선 쌀에 대한 일본 시장에서의 수요량은 계속 늘어 갔다. 그렇게 해서 조선과 일본의 쌀시장은 급속히 통합되었다.

따라서 일본 경제의 경기상황과 쌀수요 변동을 살펴본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투자와 정부투자, 그리고 유럽으로부터의 수출경쟁 감소와 세계금융시장 교란에 따른 수출 급증으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군수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전쟁중 억제되었던 소비수요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붐이 조성되는 듯도 하였으나 중화학공업에서의 생산능력 한계로 투기붐만 조성되었다. 이에 쌀, 大豆粕, 토지, 주식 등에 대한 격렬한 상품투기와 전반적인 물가상승 끝에, 1920년 동경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전후공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 수입수요 폭증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확대가 금융부문을 압박하고 투기상들과 지방의 기업가들이 몰락하면서 도시 중소은행과 지방은행들의 동요와 휴업이 확산되었다(武川晴人, 1983; 橋本壽朗, 1983).

여기에 이들 금융부문과 식민지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제용자가 실시되면서¹⁰⁾ 전반적인 고금리가 계속되어, 일본 경제는 1920년대 내내 만성불황에 빠져들었다.¹¹⁾ 〈표 2〉에서와 같이 1920~1922년, 1925~1926년, 1929~1931년 기간에

10) 1923~1926년에 일반대출에서 특별용자가 차지한 비중이 60.2~63.0%였고, 1927년 82.3%, 1928~1930년에 94.5~98.8%, 1931년 83.4%였다. 大藏省, 『議會參考書』; 伊藤正直(1983), p. 99 재인용.

11) 그 동안 통화금융부문에서 M₂는 매년 증가해 갔지만 현금통화(C) 공급은 1923년과 1927~

〈표 2〉 조선과 일본의 화폐발행액과 유통액

(단위: 백만 원,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일본은행권 발행액	1,546	1,558	1,703	1,662	1,631	1,569	1,682	1,739	1,641	1,436	1,330	1,426	1,544
통화유통액	1,936	2,115	2,096	2,164	2,131	2,097	2,028	2,148	2,199	2,122	1,889	1,798	1,905
(전년 대비)	-7.2	9.3	-0.9	3.2	1.5	-1.6	-3.3	5.9	2.4	-3.5	-10.9	-4.8	6.0
총수요변동	629	-1,767	927	-507	1,286	859	130	66	269	-165	-2,399	-1,696	725
조선은행권 발행액	114.0	136.4	100.5	110.2	129.1	120.5	110.9	124.5	132.4	118.7	90.6	100.9	124.6
통화유통액	99.1	110.3	81.2	90.8	97.0	84.3	84.8	91.5	95.6	92.5	72.6	85.9	88.5
(전년 대비)	-24.6	11.3	-26.4	11.8	6.8	-13.1	0.59	7.9	4.5	-3.2	-21.5	18.3	3.0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金融事項參考書』, 각 연도.

전년도에 비해 통화유통액이 줄어들었고, 총수요규모도 절대적 감소 또는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해가 다수였다(1921년, 1923년, 1926~1927년, 1929~1931년). 그렇게 고금리와 높은 실질임금이 유지된 가운데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국제경쟁 압력이 격화되어 경기불황은 계속되었다. 특히, 1920년대 전반 상대적 고임금에 따른 소비수요로 쌀값이 회복되고 1925년 일본은행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주가가 회복되는 등 이른바 ‘중간경기’가 있었으나 잠시뿐이었고, 1925년 말부터 다시 민간소비지출이 감소해 갔다.¹²⁾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급속하게 진행된 공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식량소비구조의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도시집중이 계속되면서 식량소비 중 채소, 과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食生活의 西洋化’가 급속히 일어났다는 평가이다.¹³⁾ 실제 이 부분에 관해 간단한 계량분석을 해 보면 신뢰성(결정계수 R^2)은 낮지만 소득증가에 대해 그 다음 해에 쌀 소비가 0.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조). 그 때문에 〈표 3〉에서와

1928년을 제외한, M_1 은 1927년을 제외한 1922~1931년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가서 중앙은행의 통화통제력이 약화되어 갔다. 전국적으로도 은행의 예·대금이 정체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경기불황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한편, 재정부문의 경우 수입은 정체된 가운데 지출이 늘어나서 경기상황에 적극적이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12) 1927년 금융공황이 다시 발생하고 4월의 주가폭락을 계기로 도시 중소은행과 지방은행, 단기자금을 취급하는 특수은행들이 정리되면서 잠시 금리가 인하되고 금융긴축이 완화됨으로써 민간설비투자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과 농촌부문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계속되어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3) 矢木明夫, 『生活經濟史』, 評論社; 森 武麿(1983), p. 229 재인용.

〈표 3〉 일본 경제의 총수요 변동

(단위: 백만 원)

연 도	민 간			정 부		순수출	계
	소 비		투 자	소 비	투 자		
	식 료	계					
1920	305	24	343	204	320	-258	629
1921	-390	-155	-858	35	131	-919	-1,767
1922	121	419	96	78	11	323	927
1923	91	206	-383	-34	-93	-204	-507
1924	256	353	451	23	-20	481	1,286
1925	468	591	-280	-114	55	607	859
1926	-439	-381	118	60	44	287	130
1927	-315	-218	-19	258	51	-4	66
1928	-168	69	-166	297	21	52	269
1929	-219	-428	96	-76	-25	267	-165
1930	-647	-932	-291	-160	-200	-814	-2,399
1931	-937	-1,096	-271	233	-108	-457	-1,696
1932	51	50	-87	154	191	439	725
1933	560	1,046	339	207	101	626	2,315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大川一司 외(1989), 각 항목에서 계산.

〈표 4〉 쌀소비의 탄력성

(단위: %)

설명 변수	전년도 소득 ~1938년	당년도 소득 ~1938년	당년도 소득 ~1931년	전년도 소득, 쌀수출 ~1938년	당년도 소득, 쌀수출 ~1938년	당년도 소득, 쌀수출 ~1931년	전년도 미가 ~1935년	당년도 미가 ~1935년
일본 (R ²)	-0.24 20.69	0.03 2.66	0.09 20.46	-	-	-	0.29 6.77	0.41 15.25
조선 (R ²)	-0.50 14.43	-0.67 27.27	-0.98 32.39	-0.08 19.06	-0.33 29.85	-0.47 38.15	-0.40 2.15	-0.59 5.16

주: 1인당 소득은 조선과 일본의 (1934~1936년 가격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을 사용. 쌀소비는 1인당 쌀소비량 변동으로 계산함.

같이 1926~1931년에 민간의 먹거리 소비가 감소해 갔고, 그 가운데 쌀의 소비도 줄어들었다.

한편, 당시 조선의 쌀수요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우선 순환적 요인을 본다. 당시 조선의 경기상황은 조선 경제에

〈표 5〉 조선은행 보증준비발행액과 각종 채권발행액

(단위: 천 원)

(1937년 말)	朝鮮銀行券額	殖銀債券額	東拓債券額	朝鮮金融債券額	債券額 합계	총계
금액	87,385	344,656	160,353	24,640	529,649	617,034

주: 1937년 말 東拓債券 발행액 2억 4,669만 8,000원 중 조선에 65% 투자된 것으로 추정.
 자료: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39년판; 『朝鮮經濟年報』, 1939년판.

투하되는 일본 자본의 규모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았다. 만주 경제에 대한 자본투자가 정책적 성격을 띤 것이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경기변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당시 산업부문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던 조선식산은행의 주요 자금원이 殖産銀行債券 발행이었는데, 그 殖銀債券이 거의 대부분 일본 금융시장에서 소화되는 구조가 그 주된 전달경로였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주로 조선은행권, 채권발행, 그리고 예금을 통해 자금을 형성해서 운용하였다. 채권발행은 식산은행, 1908년부터 동양척식회사, 1933년부터 금융조합에서 채권을 발행하였다. 1937년의 경우 보증준비 조선은행권 발행과 채권발행액의 합계가 6억 1,703여만 원인데, 채권발행액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식은채권 발행액이 3억 4,465만여 원이었다(그 해 말 당시 통화유통액은 1억 7,000여만 원, 조선은행권 발행액 2억 8,000만 원, 은행대출금 현재액 9억 5,000여만 원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연말기준 각 연도 통화유통액 증감상황을 보면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일본의 유통액과 거의 같은 추세를 나타낸다. 1921년↑, 1922년↓, 1923년↑, 1925~1926년↓, 1927~1928년↑, 1929년↓ 양상(↑는 증가, ↓는 감소를 표시)을 보였다(또 일본에서의 연말기준 통화유통액 증감상황은 거의 그 다음 해 일본 내에서의 총수요 변동상황과 일치한다). 대체로 1927~1929년에는 일본 정부가 기발행채권의 저리차환을 허용하여 부분적 활황이 와서 식은채권 발행이 증가하였다. 1929~1931년은 산업합리화 기간이면서 금수출 허용에 따라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식은채권 발행은 감소, 그리고 1931년 이후 금수출을 재금지하고 「담보부사채신탁법」을 개정하여 금융시장이 팽창할 때와 1936년 준전시체제로 이행하여 다시 금융시장이 위축될 때 식은채권 발행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식은채권 발행의 변동이 당시 조선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¹⁴⁾

14) 朝鮮殖産銀行, 「朝鮮資金問題の新段階」, 『殖銀調査月報』 제37호(1941. 6) 참조.

한편, 구조적 관점에서 당시 조선의 쌀시장 상황을 보면 1920년대 말까지는 수요층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할 수 있다. 아직 공업화가 되지 못한 상태여서 도시노동자층이 적었기 때문이다. 1928년 현재 임노동자가 119만 명이었지만, 그 중 공장노동자는 9만 명이고, 그 밖에 광산노동자, 토목·건축노동자, 운수노동자는 모두 합쳐 20만 명에 훨씬 못 미쳤다.¹⁵⁾

III. 농가의 쌀공급구조와 부채불황

1920년대 산미증식정책이 추진되고 또 그 영향을 받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수리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쌀생산은 늘어 갔다.¹⁶⁾ 그런데 쌀생산 증가와 함께 쌀값은 하락해 갔는데, 그 하락률은 생산증가율보다 훨씬 컸다. 일반적으로 수확이 1할 증가하면 쌀값은 3할 하락하는, 또는 수확량이 1할 감소하면 쌀값은 3할 상승한다는 것(『朝鮮農會報』, 1930년 1월)에 비해 그 하락의 정도는 훨씬 심해서, 7.4% 수확증가에 65.7%의 쌀값하락, 6.65%의 수확증가에 40.7% 떨어졌다.

당시 쌀의 상품화 추세는 농산물 전반의 상품화에 비해 훨씬 높아서 상품화를 주도해 갔다. 전체 농산물 판매액 중 쌀의 판매액이 가장 컸고,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1920년, 1925년, 1931년에 각각 13.3%, 27.7%, 37.5%인 데 비해 쌀의 상품화율은 32.7%, 49.9%, 그리고 65% 수준으로 훨씬 높았다(1936년에 쌀의 상품화율은 65% 수준인 데 비해 농산물 상품화율이 46.3%로 높아져서 추세의 반전을 보였다). 국내상품화율도 마찬가지로 1920년, 1925년, 1931년에 농산물 국내상품화율이 각각 4.48%, 8.21%, 13.24%였는데, 쌀의 국내유통비중은 10.0%, 15.0%, 24%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1936년에 가서야 19.21% 대비 22.1% 수준으로 좁혀졌다. 어떤 요인이 이렇게 생산증대를 훨씬 넘게 쌀

15)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編, 『朝鮮經濟年報 1939年版』 통계표, p. 16.

나머지 압도적인 숫자는 실업자와 경계선에서 빈곤에 허덕인 막벌이꾼, 지게꾼 등 도시 자유노동자였다.

16) 1927년 당시 전체 논면적 중 수리조합의 작부면적은 5.1%, 전체 현미수확량 중 수리조합의 수확량은 6.8%, 1930년의 경우 각각 8.2%, 11.1%를 차지하였다(전강수, 1984, p. 125).

1915년과 그 20년 이후인 1935년을 비교해 볼 때 50만 정보 이상의 관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되는데, 그 중 '산미증식계획기'의 수리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19만 정보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수리조합 이외에 의한 관개면적 증가가 훨씬 컸던 것으로 된다(이영훈 외, 1992, p. 63).

〈표 6〉 쌀의 상품화율 및 조선 내 유통비중

(단위: 천 석, 천 명, 천 호, %)

연도	생산량 A	농가 소비량 $E=d * p$	상품화량 $S=A-E$	수이출량 B	조선 내 유통량 $I=S-B$	상품화율 S/A	조선 내 유통비중		수이출률 B/A
							I/S	I/A	
1912	11,869	8,232	3,637	577	3,060	30.6	84.1	25.8	4.9
1915	12,488	9,118	3,370	1,823	1,547	27.0	45.9	12.4	14.6
1917	13,117	9,462	3,655	2,193	1,462	27.9	40.0	11.1	16.7
1920	14,409	9,696	4,713	3,270	1,443	32.7	30.6	10.0	22.7
1922	15,072	9,356	5,716	3,663	2,053	37.9	35.9	13.6	24.3
1925	15,594	7,813	7,781	5,439	2,342	49.9	30.1	15.0	34.9
1927	18,849	7,970	10,879	7,421	3,458	57.7	31.8	18.3	39.4
1930	21,834	8,019	13,815	8,412	5,403	63.3	39.1	24.7	38.5
1932	19,137	6,466	12,671	8,074	4,597	66.2	36.3	24.0	42.2
1935	21,753	6,201	15,552	9,513	6,039	71.5	38.8	27.8	43.7
1937	26,797	11,289	15,508	10,997	4,511	57.9	29.1	16.8	41.0
1938	24,139	12,490	11,649	6,895	4,754	48.3	40.8	19.7	28.6

자료: 『朝鮮米穀要覽』;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3年農業統計表』; 박섭(1996), p. 102.

〈표 7〉 水稻 개량경작법과 재래경작법 비교

	수확량		段當 지출(圓) (段當 비료비)	段當 수입(圓)	反當 收支差(圓)
	粳(石)	藁(貫)			
개량법	3.215	98.464	44.775(7.798)	粳47.060 藁 5.908 계 52.968	8.193
재래법	1.940	58.293	29.414(1.949)	粳27.606 藁 3.207 계 30.813	1.400

자료: 『朝鮮農會報』(1929. 1), p. 74.

의 상품화를 진행시켰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당시 총독부의 수리조합사업이든 또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규모 수리조합사업이든 생산증대에 따른 쌀값하락을 고려한 농가수입 변동과 수리사업에 따른 농민부담, 양자를 충분히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많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 7〉이 그 예이다. 이 표는 산미증식계획에서 수리사업비의 부담이 무겁다는 비난에 대해 개량농법을 채용하여 단당 수확량을 증가시키면 쉽게 그 부담을 견딜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재래경작법과 개량경작법을 비교하여 개량경작법의 우수성을 나타냈는데, 시장가격 하락에 관한 예측은 전혀 없다. 수리조합비 지

불 최소한도의 담당 수확량(=X)은 개량농업에 의한 正租 1石의 생산비(勤業모범장에서 시험한)가 12.089원(=A)일 때에 62개 수리조합비의 年賦 평균가(4.95원=B)를 고려하면

$$X=B/(5\text{개년 평균糶價}-A)=4.95/(13.744-12.089)=2.99$$

즉, 段當 4원 95전의 수리조합비를 지불하려면 段當 正租 2섬 9말 9되를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섬당 벼가격을 개량법의 경우 14.64원, 재래법의 경우 14.23원으로 설정하였다. 개량법에 의한 벼품종의 시장가격이 재래종의 그것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산업정책의 결과 전반적 쌀값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다.¹⁷⁾

수리사업 실시과정에서도 그랬다. 예컨대, 馬九坪수리조합의 경우 당시 근당 벼가격이 1925년 9.7錢, 1926년 8.8전, 1927년 6.7전, 1928년 7.4전이었는데 비해, 사업계획상의 표준곡가는 벼 1근당 원안 6.66전→1924년 수정안 5전→1927년 등급개정안 7.77전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1927년 개정안에서의 표준곡가수준은 1927~1936년 사이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1930~1934년 사이에는 원안에서의 표준곡가수준조차도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부평수리조합의 경우에도 조합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1석당 표준곡가를 12원→9원→14원→12원으로 조정해 갔지만, 이러한 벼의 시세 산정은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조합비 부과와 징수실적 부진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거기에 일본에서 취해진 농산물가격 안정대책(1921년 「미곡법」)은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에서의 산미증식계획의 정책의도가 농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국에 대한 미곡공급 증대라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식민지 농업과 나아가서는 본국 농업에 미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조선에 미곡법을 적용할 것을 줄곧 요청하였으나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로지 대책이란 것은 조선, 대만으로부터의 미곡이입을 제한하려는 것이었으나, 이것도 미국과의 조약개정 이래 실제로는 집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당시 실시된 미곡법의 운용실태를 보면, 여러 차례 관세를 면제하였고, 쌀값저하로 정부가 수매에 나설 때에도 매입 예정수량에 달하기 전에 중지하는 등 저하를 방지하는 것보다도 등귀를 억제한

17) 그런데 ‘산미증식계획’ 초기에 그 필요성을 역설할 때에는 장래 쌀가격의 하락은커녕 昂騰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朝鮮農會, 「最近水利組合の傾向批判(2)」, 『朝鮮農會報』(1922. 5)가 그 예이다.

양상이 뚜렷하였다.¹⁸⁾

반면, 수리조합 추진에 따른 부담증대는 1920년대 조선의 농가경제를 압박하여 갔다. 가령 지주부담력을 증산액의 50%라고 간주한다면 조합비의 실제부과액이 실제 지주부담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4년까지 102~167%(1927~1929년 평균 124%) 수준이었고, 지주 총수입을 구역 내 총수입의 50%라고 가정하면 지주가 부담하는 금비대 등을 제외하더라도, 지주 총수입의 30~70%가 조합비로 충당된 셈이다. 그에 비해 쌀값하락 때문에 증산액이 계획상의 예상 증산액의 90~100% 이상의 수준으로 된 것은 1937~1938년 이후가 되어서였다(1926~1936년 사이의 평균실적은 48%).

그래서 1931~1932년 추수 직후부터 양산수조에서는 수세의 半減을 결의하였고, 龍川 揚光수조와 同仁수조에서는 水組延納을, 忠流수조에서는 不納을, 蟾津江수조에서는 수세 1/3 지불을 결의하였다. 또 평남의 美林수조에서는 수세 연납운동 끝에 지주 전체가 廢畝를 결의하였고, 蔚山수조에서는 東拓 총재를 상대로 불량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龍川 三橋수조와 鳳山, 於之屯수조에서는 지주검속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1931년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크게 문제되었던 수리조합에서의 진정·반대·시위상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수리조합의 부담 과중이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의 비용까지 농민이 부담하였다는 점 외에도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참가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시행이 아니라 총독부의 일방적 결정과 강압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수리조합을 빙자해 북마전에 가깝게 진행된 청부업자의 부정, 온갖 일본 군소 토목업자들

18) 朝鮮農會, 「미가응급책에 대한 의견」, 『朝鮮農會報』(1930. 4), p. 6.

당시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7년 2월 14일 일본 정부는 외미의 관세를 철폐하여 수입을 촉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도 외미관세 철폐가 거론되었다(동아일보, 1927. 2. 26).

또 1931년 大凶作을 당하자 1932년에 500만 석의 外米를 수입하였고, 이 때 新米穀法에 의한 최고기준가격은 24원 47전이었다. 正米時勢가 그 한도 이상으로 오르면 정부소유미를 방매해서 상승세를 억제하려 하였다. 그래서 ‘米穀法은 低落하려는 米價를 인상시키는 힘은 심히 약하나 반대로 騰勢를 억압하는 힘은 상당히 크다. 현재 정부소유미는 420만 석에 달하는데, 이를 매월 1만 석씩 방매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 ……그 밖에 外米를 수입하는 방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正米는 금년중은 24~25원 이상은 騰貴할 수 없다. ……」이라는 평가가 있었다(讀賣新聞, 1932. 1. 28; 「논설—經濟解說 六題」, 『동광』 제31호, 1932. 3. 5 재인용).

그래서 ‘1931년 조만간 시행될 미곡법 개정의 핵심은 미곡법 발동의 핵심이 될 최고·최저가격을 미곡생산비, 가계비, 시장가격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생산비, 가계비 조사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시장가격의 높은 시세의 2할, 낮은 시세의 2할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 한다’는 평가도 있다(동아일보, 1931. 5. 11).

〈표 8〉 1931년 1~6월 문제 수리조합의 내용

월 별	내 용		
1월	美林수조(진정) 大渚수조(진정)	黃海수조(폐지) 金浦수조(중지)	北靑수조(반대) 解顔수조(반대) 信川수조(반대)
2월	迎日수조(진정) 東洋수조(진정) 寧山수조(진정)	中央수조(불납) 平安수조(불납) 大同수조(불납)	彦陽수조(반대) 道高수조(반대) 多侍수조(반대)
3월	蔚山中南수조(진정)	文幕수조(해산) 旌善수조(해산)	禮唐수조(반대) 牛頭수조(반대) 春柳수조(반대)
4월			於之屯수조(반대)
5월	慶山수조(계속) 黃海수조(계속)		昌寧수조(반대)
6월	昌城수조(진정)		歙谷수조(반대)

주: 이들 수리조합 중 中央수조, 平安수조 등은 5대 貯水組 수리조합에 속하는 것들이다.
자료: 裴成龍(1933), pp. 19~22에서 정리.

이 누린 이윤추구, 직원의 과분한 보수, 엄청난 거액의 창립비 등의 비리가 모두 초기 일본인 지주들과 조합직원들이 창립을 주도한 가운데 발생했다.¹⁹⁾

그러한 과중한 초기 투자비용을 자기자금 대책 없이 주로 기체에 의지해서 사업을 벌인 후, 그 상황을 조선인 농민들에게 강요한 것은 비리의 극치였다. 예컨대, 부평수리조합의 경우 설치사업비(329만여 원, 단보당 91.39원)는 주로 기체에 의해 조달되었는데, 조합체에 의한 것이 254만여 원(77%)에 달하였다. 그래서 부평수조에서는 조합채 상환금이 조합비 예산액에서 평균 59%, 조합비 결산액에서는 93%를 차지하였다. 특히, 1934년까지는 조합채 상환금이 조합비 수입을 상회하였는데, 이를테면 1925~1934년 사이에 평균 116%에 달하였다. 매년 약 20만~30만 원을 상환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체원금의 규모는 1941년에 이르러서도 거의 줄지 않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된 19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32년까지는 오히려 기체원금이 증가하였다는 점, 그 기체는 1920년대를 통해 연리 8% 이상의 고리자금이 주로 사용되었다.²⁰⁾

19) 조합원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특히 50정보 이상의 소유자 중에 일본인 8명(0.7%)이 980.1정보(27%)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인 대지주가 조합창설에 특히 적극적이었다(이영훈 외, 1992, p. 750).

20) 수리조합 부채 중 9푼, 9푼 3리, 9푼 5리 등의 고리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다. 「불

조선 전체로 보면 149개 수리조합 공사비 총액 1억 1,556만 5,000여 원 중 기체에 의한 자금동원이 1억 412만 1,000여 원에 이르러, 투자자금의 90.1%가 부채에 의한 것이었다.²¹⁾ 당시 수리조합은 자기자본비율 9.9%인, 애초부터 전형적인 부실기업 상태였고 그 부담을 조선인 농민들이 떠안은 것이었다. 수리조합구역 내 자작농, 소작농, 지주 등의 농작수지가 각각 15원, 5원, 9원씩 적자를 보였고, 구역 내 토지가격이 경기도와 전라남도,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는 수리조합 시공으로 오히려 하락하였던 사실이 이를 나타낸다.²²⁾

그래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20년부터 시작된 수리사업의 기체가 1~2년의 거치기간 이후 15년의 상환기간을 갖는 것이 많았고, 거기에 1925~1932년간은 쌀값의 하락으로 농가수입이 오히려 감소해서 농가의 지불능력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상환기채원금이 오히려 늘어난, 즉 현대 기업의 개념으로 보면 거의 파산상태에 처해서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상태인, 민스키(1982)가 제시한 부채공황(debt deflation)의 상태에 있었다.²³⁾

이러한 상황은 다른 시기 또는 당시 일본과 비교한 1920년대 후반 조선의 화폐수요 변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황을 제외하면 1923~1925년간 조선의 연평균화폐발행 증가율이 6.73%였고 연평균화폐유통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1.83%(1922~1925년간의 경우 -1.53%에 비해 그보다 낮은 -5.23%)이었는데 비해, 1926~1929년간은 연평균 0.1% 화폐발행 증가율에 대해 화폐유통액의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3.26%였다(앞의 <표 2> 참조). 즉, 화폐발행 증가율보다 높은 화폐수요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화폐의 수요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소작농 등 저소득층의 경우 농산물의 시장판매는 현금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 또는 농업투입물들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농가의 물품구매가 현물구매의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열려 있었다는 사실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경기도에 대한 농가경제조사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경영비와 가계비 지출의 각 항목 중 피복

량수리의 고리채정리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동아일보, 1928. 5. 10).

21)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1929).

22) 이 토지가격 변동은 1929년도 상황인데, 1930~1931년은 지가하락이 더 심하였기 때문에 그 외 전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1929).

23) 그렇게 1930년대를 지낸 후 특히 1930년 대공황을 겪은 다음 수리조합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결국 1934년 '산미증식계획'을 해소할 때, 당시 197개 수리조합(22만 정보) 중 33.5%인 66개 조합이 부실수리조합으로 평가되어, 그 66개를 감·을·병 3유형으로 나누어 구제·정리하여야 했다.

〈표 9〉 일제하 농가의 농업경영비 지출방식

(단위: 원)

		종묘비	사료비	비료비	가공원료비	노임	소작료
자 작 농	현금지불	0.917	—	19.340	—	40.727	—
	현물지불	25.623	40.690	57.043	7.613	42.573	—
자소작농	현금지불	0.450	—	9.573	—	27.070	3.533
	현물지불	22.447	25.590	49.497	4.983	71.067	91.817
소 작 농	현금지불	0.583	—	2.103	—	7.233	3.627
	현물지불	19.670	16.280	35.427	5.063	38.500	120.723
평 균	현금지불	0.650	—	10.339	—	25.010	2.387
	현물지불	22.580	27.520	47.322	5.886	50.714	70.847

자료: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査(全羅南道の分)』, 1930년에서 작성.

〈표 10〉 일제하 농가의 가계비 지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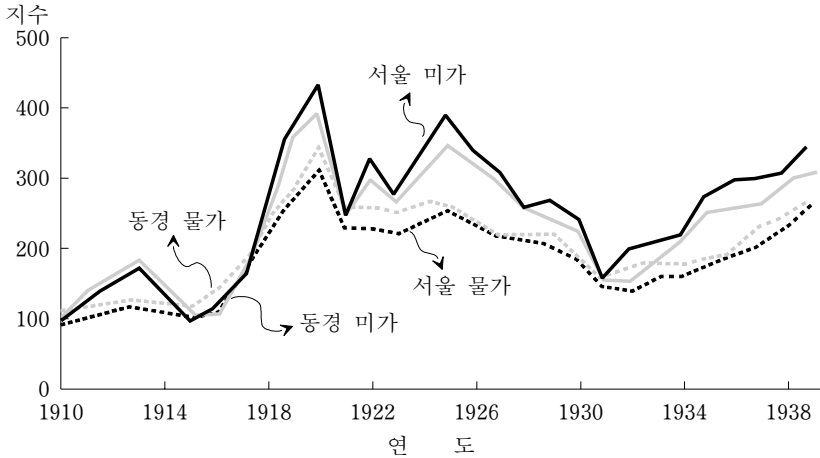
(단위: 원)

		음식비	피복비	광열비	교제비	기호비	관혼상제비
자 작 농	현금지불	28.477	30.053	5.883	29.217	9.287	66.123
	현물지불	366.496	0.487	67.450	2.653	0.046	35.690
자소작농	현금지불	15.527	27.807	3.257	7.443	5.653	1.230
	현물지불	272.523	0.373	46.280	5.644	1.010	1.063
소 작 농	현금지불	33.390	17.873	3.050	3.580	3.667	22.317
	현물지불	172.650	0.537	40.413	0.910	—	12.730
평 균	현금지불	25.798	25.244	4.063	13.413	6.202	29.890
	현물지불	270.556	0.466	51.381	3.069	0.352	16.494

자료: 〈표 9〉와 같음.

비와 교제비를 제외하면, 비료비, 사료비, 종묘비, 가공원료비, 그리고 음식비, 광열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현물지출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농가의 계급별 쌀의 상품화율에서도 엇볼 수 있다. 농가를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농으로 나누어서 벼의 상품화율을 볼 때에도 지주계급의 상품화율이 97.4%로서, 자작농의 62.5%, 자소작농의 71.7%, 소작농의 11.6%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시장에 출하된 상품화된 쌀 2,876만 7,000석 가운데 지주로부터 판매된 부분이 5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호당 취득량이 많은 자소작농으로부터의 판매분이 27.0%이어서, 이 두 부분이 전체의 83.9%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자작농으로부터의 판매분이 13.1%, 소작농으로부터의 판매분이 3.0%로서 이들 부분은 전체의 16.1%에 불과하였다(印貞植, 1949).



자료: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米穀要覽』(1940).

<그림 1> 일본과 조선의 물가·쌀값 비교

결국 1920년대 후반 충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에 따른 큰 폭의 쌀값하락은 물품화폐로서의, 특히 가치저장 및 지불수단으로서 쌀의 가치가 크게 불신받게 했다. 즉, 가치하락이 진행되는 물품(화폐)에 대해 보편적인 디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당시 특수하였던 부채경제의 진행이 결합됨으로써 농민들이 현금수요, 즉 유동성 선호를 높여 간 상황이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조선에서 쌀의 시장가격은 전반적 물가수준보다, 또 일본의 쌀값보다 더 큰 변동을 겪었다.

IV. 쌀값하락이 농업에 미친 영향

1920년대 후반의 급격한 쌀값하락은 소작료를 물납으로 받던 지주계급으로서 는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들 자신의 지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작지를 한 곳에 집중 시킨다든지, 우량소작인을 선발해서 표창한다든지 하면서 경영에 적극 개입해 들어갔다.²⁴⁾

24) 이 때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였다. ① 특정 다수확 품종을 파종한다. ② 모판은 단책형으로 하고, 적정량을 파종한다. ③ 모내기는 정조식으로 하고 한 번에 심는 모의 포기수는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촘촘하게 심는다. ④ 반드시 적기에 일정량의 화학비료와 퇴비를 준다. ⑤ 일정 횟수 이상 중경제초한다. ⑥ 일정

〈표 11〉 소작쟁의의 원인별 건수 및 비율(1927~1939년)

(단위: 건, %)

	1927~1929년		1930~1932년		1933~1936년		1937~1939년	
소작권/소작지 관련	1,082	47.3	986	58.2	51,494	78.8	58,638	82.8
소작료 관련	1,109	48.5	517	30.5	12,080	18.5	11,393	16.1
기 타	97	4.2	190	11.2	1,754	2.7	816	1.2
계	2,288	100.0	1,693	100.0	65,328	100.0	70,847	100.0

자료: 朝鮮總督府 農林局(1940), pp. 21~23.

동시에 소작관행이 점차 소작농에게 불리하게 되어 갔다. 첫째로 소작기간이 짧아졌다. 당시 소작관행에서 소작기간은 압도적으로 부정기의 것이 많았다. 논 의 경우는 전국 평균 81% 가량, 밭의 경우는 80% 가량이었다. 소작기간이 1년 인 경우도 빈번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1소작기 만에 소작권이 바뀌었다. 그렇게 소작농이 교체될 때마다 소작료율이 상승하였다. 1910년대 초에 45%였던 논 의 평균소작료율이 1920년대 말에는 51%로 상승하였다(박섭, 1992). 조선총독부가 1924년에만 하더라도 지주층의 농업경영 부실에 대해 ‘지주 지도에 관한 건’과 같은 정책을 동원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 시장의 압박을 겪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소작농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게 된 것도 그러한 시대환 경의 산물이었다(1928년 행정명령 ‘소작관행 개선에 관한 건’ 발동).²⁵⁾

소작료를 인상시키려는 지주들의 공세에 대해 소작농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급격한 쌀값하락 아래 이 양자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와 대립은 이 전후 기간 전개된 소작쟁의의 양상에서 엿볼 수 있다. 소작권 및 소작지 관련 소작쟁의가 점점 비중이 높아져 간 1930년 이후와는 달리 소작료를 둘러싼 쟁 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빈발한 소작쟁의에 대해 지주쪽의 대응도 더욱 강화되고 고도화하였다. ‘계약경작제도’가 그 예이다.²⁶⁾

깊이 이상 가을같이한다. ⑦ 소작료로 납부하는 벼는 미국검사에서 상등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건조시킨다(장시원, 1989, pp. 109~142).

25) 그 내용은 소작기간을 3년으로 하고 소작권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 소작료 일부 체납을 이유로는 소작계약을 해약할 수 없도록 하고, 소작료가 고율인 경우에는 그것을 점차 인하시키도록 요구하였다. 朝鮮農會(1936).

26) 朝鮮農會, 「소작쟁의에 대한 지주의 신전술」, 『朝鮮農會報』(1932. 2).
과거 동유럽에서 있었던 농장영주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 소작쟁의에 대한 지주쪽의 신전술로서 남조선 지방에서 계약경작제도가 발생했다. 소작농민의 빈궁을 틈타 전 조선에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소작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수확물은 전부 지주쪽의 소유로 되고, 경작자는 다만 계약 임금에 따라 경작하는 하나의 임금노동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지주쪽으로는 아주 교묘한 소작쟁의 방지책이고, 소작인으로서의 농노제도라 불러야 할 임금노동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총독부에서도 이 성행을 중대시하고 대책 강구중이다. 그러나 현 소작제도하에서는 계약자유 원칙 이외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작법 실시를 통해 감독하는 것밖에 다른 대책은 없다.”

그 일련의 상황은 신용의 창조가 화폐의 창조를 낳고, 그 다음 신용이 상환되면서 통화량의 감소로 끝나는 신용과 화폐의 순환적 전개에 관한 J. 케인스와 순환주의자(circuitist)들이 주로 강조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신용의 획득이 원금상환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부담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신용수요가 소비영역이 아닌 주로 생산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 축적의 논리에 눈 뜨게 만든 것이다. 비료대 등 상승해 가는 생산비 조건과 달리 하락해 가는 쌀값 아래 농업경영의 파산을 참담하게 맞본 농가가 늘어나 전반적 하강분해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반면 파산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한 지주층의 농업경영에 대한 개입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이른바 ‘동태적 지주’의 확산과 토지집중의 강화였다.

즉, 일제하 지주제의 유형별 파악에 있어서 종래 ‘(일본인 지주)=(동태적 지주), (조선인 지주)=(정태적 지주)’론에 대해 ‘(일본인 지주)=(동태적 지주), (조선인 지주)=(정태적 지주)+(신흥지주)’론의 제기가 있었고, 이 때 동태적 지주를 자본가적 지주로 볼 수 있는지(東畑精一, 久間健一), 그 기업가적 성격과 소작농민의 경영상 자립성 상실을 식민지 지주제의 성격을 규정한 기본요소로 간주한 宮嶋博史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대체로 일제하 동태적 지주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1930년대 이후의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그것은 수리조합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1925~1931년 사이 쌀값 대하락이란 시장기구의 압박 아래 부채경영의 생존추구가 전반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1920~1930년대 초의 농민층 분해양상은 <표 12>와 같다. 지주(갑)과 소작농 등 양극단 집단이 증가한 반면, 중간계층인 자작농의 비중은 1921~1922년 진 후 호황과 1925년의 ‘중간경기’ 때의 증가세, 그 이후 계속된 쌀값 디플레에 따른 농가타격 심화기에 감소세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또 지주(을)의 경우 1920년

〈표 12〉 1920~1930년대 농민분해 양상

(단위: 천 호, %)

연도	지주(甲)		지주(乙)		자 작		자작겸 소작		소 작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1920	15	100.0	75	100.0	529	100.0	1,017	100.0	1,082	100.0
1921	17	112.1	80	106.2	533	100.7	994	97.7	1,091	100.8
1922	17	113.1	81	108.7	534	101.0	971	95.4	1,106	102.1
1923	17	118.0	82	109.4	527	99.6	951	93.5	1,113	102.8
1924	18	123.0	83	110.8	525	99.3	934	91.7	1,142	105.4
1925	19	130.1	83	111.2	544	102.9	910	89.4	1,184	109.3
1926	20	135.6	84	111.4	525	99.3	894	87.8	1,191	110.0
1927	20	136.7	84	111.9	519	98.1	909	89.3	1,217	112.4
1928	20	137.0	83	111.2	510	96.5	894	87.8	1,255	115.9
1929	21	140.6	83	110.3	507	95.8	885	87.0	1,283	118.5
1930	21	141.1	82	109.6	504	95.2	890	87.4	1,334	123.2
1931	23	151.7	81	108.3	488	92.3	853	83.8	1,393	128.6
1932	31	216.8	71	95.4	476	90.0	742	72.9	1,546	142.8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農地年報』, p. 139; 『朝鮮小作慣行』, pp. 28~29.

〈표 13〉 殖銀과 금융조합의 대출금리 비교

	단기대부(日步)	장기대부(年利)
殖産銀行	3錢 2厘~3錢 6厘	1할
금융조합	4錢 8厘	1할 3푼 5리

자료: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1944), pp. 606~608.

대에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1928년부터는 감소해 들어가서 마침내 1932년에는 1920년보다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경지면적으로 볼 때는 1918년 50.4%, 1926년 50.7%로 거의 변함이 없던 소작지율이 그 이후 급상승해서 1932년에 56.5%로 높아졌다.²⁷⁾

부채불황 아래 시장의 압박을 견디는 힘은 아무래도 농가의 자금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기자금 규모뿐만 아니라 타인자금, 특히 제도 금융의 이용가능성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부채불황 아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 제도금융 이용가능성은 당시 금융대출 관행에 주로 토지담보 대부가 일반적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대토지소유자가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에의 접근성과 이자율 모두 대지주 쪽이 유리하였다. 〈표 13〉에서와 같이 주로 대지주에

27)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대한 대출기관이던 殖産銀行과 동양척식회사의 이자율은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였던 금융조합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 밖의 농민들은 그런 殖銀·東拓·금융조합 등이 아닌 월 3, 4푼 내지 1할의 고율 금리를 지불하며 사금융에 의존해야 하였다.

또 부채불황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를 민족별로 본다면 공적 금융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 아무래도 일본인 대지주가 더 유리하였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족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전북지역 경지 100정보 이상 대지주의 민족별 변화추세에서 보면, 1919~1926년 사이에는 조선인 대지주의 戶數와 소유면적별 비중이 모두 늘어났으나, 1926~1930년간에는 모두 정확히 정체상태에 있었다. 소유면적의 실제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인 대지주는 1926~1930년 기간에 戶數와 소유면적 모두 늘어났다.

1930년부터 건립되어 이용하기 시작한 농업창고 접근가능성도 계절별 가격변동이 심한 쌀시장에서는 큰 작용을 한다. 1931년 말~1932년 초 경상북도 도내 농업창고 이용에 대한 다음의 보고가 좋은 예이다.

“경북 도내 농업창고는 모두 滿庫상태이다. 이용효과가 100%인 것이다. 그러나 농업창고 본래 목적은 중농 이하 다른 금융이 쉽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저리자금을 대부해서 곡류방매를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 다수는 지주·호농 혹은 상인들이고, 구제가 필요한 중농 이하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비료대, 기타 부채에 쫓겨 미가 여하에 관계없이 수확 후 바로 방매하는 상황이다.”²⁸⁾

쌀값하락은 상대적으로 발작물생산 증가를 낳을 수도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쌀값하락이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상업적 농업 전개라고 하는 농업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지주제가 약화되고 중농표준화가 진행되었다(栗原百壽, 1980; 綿谷尙夫, 1959). 그러나 조선은 아직 전반적 소득수준이 낮아서 발작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벼농사에 계속 묶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가하락에 따른 농가파산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어서 일제는 농가고리채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28년부터 그에 대한 논의가 조선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아직 전혀 미지수였다.²⁹⁾ 1930년 일본의 농민단

28) 朝鮮農會, 「농업창고 이용자 불철저」, 『朝鮮農會報』(1932. 2).

29) 이른바 ‘시장경제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체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논의가 활성화되어³⁰⁾ 1933년 3월 17일에야 「농촌부채정리법」이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그 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농가부채 정리의 경우에는 앞의 미곡법의 시행과 달리 본국과 식민지 조선의 구별 없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부채총액은 물론 일본의 경우가 더 컸겠지만 농가가 겪는 고통은 오히려 부채에 의한 수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조선의 경우가 더 심각한 실정이었다.³¹⁾ 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과 조선에서 농가경제상황 조사가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농가부채액이 45억 원, 조선에서는 8억 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방법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규제(‘철폐’), 고리채 차환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 이자 일부 탕감 등을 통해 10년간에 걸쳐 정리해 간다는 것이었다. 차환자금은 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었고, 1937년에는 「農村負債整理資金 特別融通 損失補償法」을 통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리채 정리과정에서도 영세농민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³²⁾

시장의 폭력성이 최하층 조선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기반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³³⁾ 예컨대, 1930년 경상남도의 경우 專業한 농가호수가 1만 1,627호, 인구 3만여 명이었는데, 그 숫자는 경상남도 총호수 29만 3,000여 호의 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³⁴⁾ 1930년대 만주, 일본 등 자의에 의해

불량수리조합 구제에 대해서는 고리채 정리가 가장 중요해서 총독부에서도 극력 연구 중. 그러나 수리조합 舊債 중 9푼, 9푼 3리, 9푼 5리 등의 고리채가 약 2,000만 원. 이를 9푼 이하로 차환하기는 쉬운 일 아니다(「不良水利의 고리채 정리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1928. 5. 10).

30) 농가부채 정리문제로 일본 동경에 帝國農會長, 全國町村會長, 金融組合長 등 3단체 대표가 회합하여 9개 조의 성안을 건의(중외일보, 1930. 9. 12).

農家負擔 支拂猶豫令 茨城外 15개 縣 農民 請願서 제출(東京)(동아일보, 1932. 6. 4).

31) 농촌 「모라토리엄」문제, 조선은 一層必要(동아일보, 1932. 6. 8).

농촌 「모라토리엄」문제, 조선은 一層必要(동아일보, 1932. 9. 8).

收入보다 지출이 초과 부채생활에 우는 농민 朝鮮農會에서 2년간 조사 농가경제상황 발표 ……限度까지 진 농가부채 전부가 농업용(동아일보, 1933. 5. 13).

32) 고리借金整理, 萬6천 圓 대여, 窮農은 이용을 못해(安城)(동아일보, 1933. 9. 14).

細民層에 깔린 부채 5,203만 圓 총독부 조사//이자는 원금의 4배半, 담보물은 거의 처분, 가재도구는 대부분 경매에 複利관계로 辨償難(위 자료, 1933. 11. 18).

33)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란 A.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J. R. Hicks(1969)에서와 같은 목가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오히려 K. 폴라니(1957)에서와 같은 폭력적 세계일 따름이다. 더구나 국민대중이 공업화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식민지에서 시장의 확대·심화는 그들의 삶의 기반 파괴를 낳을 뿐이었다.

34) 그 상황은 하층농가가 더욱 극심하였고, 그들 중 임노동자로 되는 경우는 전혀 자금력을 갖지 못하고 거의 부랑노동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 실패의 원인은 소작료 고율에 따른 생활곤란, 1929년의 한발에 따른 재기불능, 미가폭락에 따른 농업경영 곤란 등이 거론되었다. 朝鮮農會, 「농촌불황과 농가의 轉業」, 『朝鮮農會報』(1930. 5).

한반도를 떠나 타국으로 떠돌게 된 인구가 급증한 것도 이러한 시장의 폭력과 식민지 권력의 폭압이 낳은 결과물이다.³⁵⁾

농가의 '법정화폐 선호' 추세는 1930년대 들어 줄어들어 갔다. 무엇보다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업노동자의 양적 증대와 그에 따른 쌀수요 증대가 쌀값을 상승시켜 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쌀의 국내시장 유통비율이 1930년대 중반 높아진 것이 그것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벼가격이 점차 안정 또는 상승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세계쌀시장의 미가지수가 1913년을 100으로 할 때, 1931년 84에서 1934~1936년에 91, 106, 98이었는데 비해, 조선의 미가지수는 89에서 각각 144, 159, 165로 상승해 갔다. 반면에, 1930년 이후 노동자 파업에 참가인원이 크게 증대되어 간 것은 공업노동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쌀값상승이 그들의 생계비에 미친 압박이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³⁶⁾

V. 결 론

본 연구는 일제하 농업부문에서의 산업정책(산미증식계획)에 관한 연구를 그때가 시장경제체제 아래 있었음을 감안하여 그 정책의 결과를 시장의 변동을 매개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채택한 것이다. 1920년대 농촌경제를 고찰할 경우 무엇보다 1925년 이후의 급격한 쌀값하락을 주목하였다. 그 쌀값하락이 전반적 디플레이션을 야기해서 당시 농촌경제에, 그리고 따라서 식민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1925년 이후의 쌀값하락을 1929년 세계대공황의 일부로서만 보지 않고 그 자체를 중심으로, 또 1920년대의 세계적 농산물 가격 하락의 일부로서만 보지 않고 조선과 일본 쌀시장 그 자체의 수요·공급 구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개괄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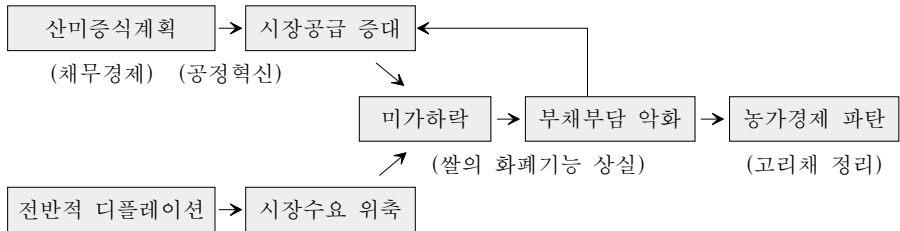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디플레의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수요쪽 요인과 공급쪽 요인을 함께 고

35) 당시 한국인의 만주 이주와 그 곳에서의 정착실태에 관한 제도적 접근에 관해서는 김재훈(2003)을 참조하라.

36) 1920~1936년 사이에 노동쟁의 참가인원을 보면, 1920~1925년에 각각 4,599명, 3,403명, 1,799명, 6,041명, 6,751명, 5,700명, 그리고 1926~1929년에 5,984명, 1만 523명, 7,759명, 8,293명이었는데 비해 1930~1936년에는 1만 8,792명, 1만 7,114명, 1만 4,824명, 1만 3,835명, 1만 3,098명, 1만 2,187명, 8,248명 등이었다.

朝鮮總督府 警務局(1933), pp. 143~144.



〈그림 2〉 1925~1931년 米價하락의 전개과정

찰하는 관점을 채택하였다. 쌀값하락의 원인은 우선 수요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쌀시장의 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쌀시장이 일본 쌀시장의 변동에 거의 통합되어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시 국내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조선 내 쌀시장의 수요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25년 당시 농산물시장 거래액이 3억 3,340만 여 원이었는데(상품화율 27.7%), 그 중 쌀의 상품화율은 49.9%였다. 농산물시장 거래액의 29.6%, 쌀의 시장거래량의 30.1%만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었고 나머지는 일본 시장으로 이출되었다.

그래서 일본 쌀시장의 수요동향을 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례 없는 호황을 겪은 후 그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지 못하고 1920년대 줄곧 구제용자로 유지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계부분을 정책금융으로 유지하는 동안 전반적인 고이자율이 유지되었고, 따라서 만성불황이 계속되었다. 1925년의 ‘중간경기’로 반짝호황을 본 후 1920년대 후반에는 날로 경기가 악화되어 갔고 따라서 쌀수요는 계속 감소해 갔다.

공급쪽 상황을 보면 일제가 식민지 산업정책으로 추진한 녹색혁명, 즉 ‘산미증식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혁신이 공업부문에서 일어날 때에는 잠정적이거나 시장이 불완전경쟁 또는 독점상태일 수 있어서 그 이익이 슈페터(및 네오슈페터리안)가 말하는 기술지대로서, 또 마르크스가 말하는 특별잉여가치로서 생산자에게 갈 수 있다. 이런 대가는 주로 전문적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중간재부문에서, 특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소비재부문에서도 지적재산권이 보장되는 상황 또는 시장에서 상표가치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가능하다. 요컨대, 기술혁신이 제품혁신의 형태로 진행될 경우에는 혁신수행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공정혁신의 경우에는 시장공급 증대에 따른 경쟁격화만 초래해서 생산자들은 오히려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농업에서는 기술혁신 또는 생산력 발전이 일어날 경우 그 이익을 생산자가 획득하기가 훨씬 어렵다.

오히려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녹색혁명이 사회적으로(또는 국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낮거나 음(-)일 수 있어서 공급증가가 시장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증대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농업생산자의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 농업의 경우 기술혁신이 공업부문에서 생산된 투입재에 대한 구매증가, 즉 공산물의 시장확대를 낳는 한편, 증산된 농산물의 가격하락이 공업부문의 생산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녹색혁명이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그것이 생산농민의 복지증대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지 않으면, 생산농민들에게 농업투입재 증가 등 투자비용 증대에 따른 고통과 생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라는 이중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에서 실시한 농업정책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새마을운동 기간중 통일벼 생산을 통한 녹색혁명의 경우 그나마 ‘이중곡가제’를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1990년대 들어 정부가 실시한 농업생산 증대의 경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덴마크식 농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지원하였으나 증산에 따르는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으로써 농가의 막대한 피해와 농가부채, 농민파산만 낳고 말았다.³⁷⁾ 이 두 경우는 그나마 농업에 자작농체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녹색혁명이 추진되었기에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일제하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도 또한 그 부정적 사례였고, 거기에 지주제의 존재는 그 재앙을 중간 이하 농민에게 집중적으로 가져다 주었다. 생산증대에 따른 쌀값하락은 계층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37)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개방농정에 대비해 정부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주로 시설현대화와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정책기조였다. 이에 따라 42조 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1992~1998년), 15조 원 규모의 농특세사업(1995~2004년), 45조 원 규모의 농업 농촌투융자계획(1999~2004년)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투자정책은 수입개방 속에서(농림축산물의 연평균수입액이 WTO 출범 이후인 1995~1997년간 연평균 98억 달러로서 1988~1994년간의 65억 달러에서 51.2% 증가) 시설과 생산증대를 불러 과잉을 구조화시켰고, 가격과 소득은 보장되지 않아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말았다. 영농형태별로 보아도 1992년 이후 빠르게 농가호수가 늘어난 화훼, 특용작물, 축산, 채소농가들의 호당 부채비율이 더 높고, 줄어들어 간 논벼 전작농가의 부채비율은 낮았다.

식민지 농업에 대한 시장경제의 생존법칙 강제는 ‘동태적 지주’의 출현을 강제하였고, 그것은 곧 소작농민에 대한 지주의 관리·감독 강화와 착취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소작쟁의에 소작료인하 반대가 소작권 또는 소작지 문제보다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데에서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디플레이션 기간에 시장의 폭력성은 자금뭍박을 감내하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경영규모의 차이와 관련되어 작용하였다. 여기에 당시 제도금융이 토지담보대출을 관행으로 하던 상황에서는 소유토지 규모가 곧 금융에의 접근성을 결정지었다.

결국 자작농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해 가고 중소지주층(지주 乙)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결국 1927년 이후에는 몰락해 갔다. 그것은 곧 토지집중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1920년대에 일관되게 대지주층(지주 甲)의 증가경향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조건과 금융의 접근성은 결과의 민족별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분석대상인 1920년대 후반에는 조선인 대지주는 정체상태에 있었던 데 반해 일본인 대지주는 그 숫자와 소유토지 규모면에서 일관되게 늘어 갔다. 결국 시장이란 ‘악마의 맷돌’이 갖는 논리구조를 깨닫자마자 다수 조선인 중소지주층은 그 맷돌의 희생자로 될 뿐이었다.

일제는 과중한 농가부채 부담으로 농촌 전체가 파국에 빠져드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고리채 정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촌갱생운동을 벌였지만, 이는 일제의 식민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었다. 삶의 조건이 파괴된 농업은 저임금 공업노동자 공급원으로 기능해서 식민지 공업생산의 조건을 마련하였고, 다른 농민들은 해외로 유랑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녹색혁명에 관한 두 가지 평가, 즉 ① 생산증대, ② 분배면에서 양극화 확대라는 두 측면에 대해, P. C. Rosset(2000), W. C. Thiesenhusen(1972)과 같이 대토지소유제하에서의 녹색혁명이 시장경제의 폭압성을 강화시켜 분배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결국 생산력 증대가 급진적 토지개혁과 재

38) 녹색혁명에 관한 두 가지 평가, 즉 ① 생산증대, ② 분배면에서 양극화 확대라는 두 측면에 대해, Griffin(1972)은 녹색혁명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 식량생산 증가율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분배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토지소유권을 농업재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볼 때 대토지소유주 아래 무토지농민의 경작과정에서는 식량생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Griffin은 급진적 토지개혁과 재분배를 효과적인 농업정책의 근본원리로 주장한다.

반면 대체로 녹색혁명의 생산력 상승결과는 인정되는데, 그러면서 P. C. Rosset(2000), William C. Thiesenhusen(1972)는 분배상의 문제점을, Keith Griffin(1974), M. V. Reddy

분배 요구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당시 쌀값이 수요감소, 쌀생산 증가율 이상으로 하락했음을 주목하였다. 또 1920년대 후반에 통화발행 증가율 이상으로 화폐유통량이 증가해 갔음을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의 원인은 쌀생산 증가에 따른 쌀값하락이 당시 아직 실물화폐로 사용되던 쌀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농민들이 그 전보다 쌀을 시장에 더 많이 내놓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를 높였음을 주목하였다.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증가를 화폐이론과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수단, 지불수단, 그리고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으로 설명되는데,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P. 사무엘슨(1973) 등 신고전학과와 K. 마르크스의 『자본론』, 양쪽에서 강조된 것이다. 식민지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수량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화폐의 수요(케인스가 정리한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는 쌀을 이용한 현물구입의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용도를 위한 화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신용의 창조가 화폐의 창조를 낳고, 그 다음 신용이 상환되면서 통화량의 감소로 끝나는 신용과 화폐의 순환적 전개에 관한 J. 케인스와 순환주의자(circuitist)들이 주로 강조한 부분이다.³⁹⁾ 신용의 획득이 원금상환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부담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신용수요가 소비영역이 아닌 주로 생산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 축적의 논리에 눈을 뜨게 만드는 부분이다.⁴⁰⁾ 자본가들은 투자와 개인소비가 받

(1995)는 환경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39)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케인스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Economic Journal*에 실린 케인스의 논문들과 화해시키려는 데 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순환주의자(circuitist)들의 관심은 『일반이론』 이후의 *Economic Journal* 논문을 주목하고 그것이 『일반이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본다. 이들은 neo-post Keynesian으로 불린다. 그들의 화폐이론은 H. Minsky, P. Davidson, N. Kaldor와 같이 M. Freidman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K. Marx와 J. Schumpeter는 물론 J. Keynes, K. Kalecki, K. Wicksell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Rochon, 1999, pp. 2~3).

40) 자본주의 경제에서 ‘축적’의 목적은 도구(widgets)나 도구를 생산하는 기계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목적은 “그것이 시작될 때의 것보다 더 많은 화폐로 끝나는 것이다”(J. M. Keynes, 1979, p. 89).

기본적으로 교환행위가 시장 본래의 기능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발생하였다고 보고, 시장은 교환행위장소가 아니라 부채해소수단으로서의 화폐를 버는 장소라 인식된다. 화폐가 교환행위의 발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 보지 않는 것이다(G. Heinsohn and O. Steiger, 1989, p. 193; L. R. Wray, 1993, pp. 8, 13, 16 재인용).

쳐 주는 범위에서 그 스스로 이윤을 결정한다는 칼레키의 논점을 생각할 때 기업의 이윤은 투자와 생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용에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Louis-P. Rochon, pp. 7, 16). 물론 마르크스도 공황국면에서는 신용의 연쇄적 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수요가 급증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박만섭(2003)은 화폐내생성 이론에서 화폐스톡의 결정이 대부수요에 의한다고 보는 포스트케인지안과 중앙은행의 기준금 공급, 즉 대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는 세계인스학파의 차이로 본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는 포스트케인지안과 관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하 당시 상황에서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것이든 농민의 자발적인 수리사업이든 전반적인 수리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지주 또는 농업생산자 전반이 신용수요가 증대되고, 따라서 그 상황을 위한 화폐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대체로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리사업 관련 기체가 몇 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192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에 비해 예상하지 못하였던 쌀값하락은 수리사업에 착수하였던 많은 지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부채불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부채상환을 위한 지주들의 경쟁과 소작경영 강화가 시작되었고(동태적 지주의 출현, 소작농민 착취 강화), 부채상환이 어려워진 수리조합에서는 수세 연납 또는 불납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실물화폐로서의 쌀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 갔고 지불수단으로서, 따라서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1920년대 후반 쌀값하락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미증식계획이란 수리사업이 일제 금융자본의 이윤창출과 증식기회를 만들었고(김준보, 1982), 1920년대의 디플레이션정책이 불황을 가져온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으로부터의 교란이 1920년대 후반의 쌀값하락을 초래한 점은 부인할 수 없되, 그것은 당시 기체를 통한 쌀증산운동(수리사업)을 통해 관철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금융부문의 교란은 실물부문, 즉 산업생산부문의 취약한 구조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민스키(1982)와 함께 그 훨씬 이전에 금융교란과 불황과의 관계를 강조한 선구적 연구로 평가되는 피셔(1933)를 주의 깊게 읽어 보더라도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란 수익성 좋은 실제 투자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심리가 만연하고 그에 따른 대중의 열광이 고조될 때,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한 대중에 대한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의 전 지구화(globalization)가 강조되고 경제의 금융화가 강조

됨은 신용의 전 세계적 공급확대라는 시대적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신용의 수요, 즉 실물(산업생산)부문의 전 지구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 파괴적 영향은 다시 실물(산업생산)부문에 관련되는 각 계급을 통해 전개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경제사학』.

동아일보.

중외일보.

橋本壽朗, 「戰間期の景氣循環」, 武井邦夫 外 編, 『景氣循環の理論』, 時潮社, 1983.

久間健一, 『朝鮮農業近代的様相』, 西ヶ原刊行會, 1935.

溝口敏行·梅村又次, 『舊日本植民地 經濟統計』, 東洋經濟新報社, 1983.

宮嶋博史, 「植民地下朝鮮人大地主の存在形態に關する試論」, 『朝鮮史叢』 5·6合併號, 1982.

近藤康男, 『農業經濟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32.

김재훈,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산업순환’과 국가개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제도’로 본 한국인의 만주지역 정착」,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6호, 2003.

金俊輔, 『韓國資本主義史 研究(I, II, III)』, 일조각, 1982.

大川一司·東畑精一, 『朝鮮米穀經濟論』, 1939.

大川一司·高松信清·山本有造, 『國民所得』, 東洋經濟新報社, 1989.

綿谷尙夫, 「資本主義の發展と農民の階層分化」, 東畑精一·宇野弘藏 編, 『日本資本主義と農業』, 岩波書店, 1959.

武田晴人, 「恐慌」, 1920年代史研究會 編, 『1920年代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出版會, 1983.

박만섭, 「새케인즈학과와 포스트케인지안학과의 내생화페이론」, 『사회경제평론』 21호, 2003.

박 섭, 「植民地朝鮮における小作關係政策の展開」, 『日本史研究』 353호, 1992.

_____, 「식민지기 미국 생산량 통계의 수정에 대하여」, 『경제학연구』 44집 1

- 호, 한국경제학회, 1996.
- _____, 「1912~1940년의 한국농업생산통계」, 『경제학연구』 47집 4호, 한국경제학회, 1999.
- 박영구, 「'朝鮮産米増殖計劃'期 종자개량의 경제적 효과연구」, 『농업정책연구』 16권 1호, 1989. 12.
- _____, 「일제하 산미증식계획의 경제사적 성격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襄成龍, 『조선경제의 현재와 장래』, 漢城圖書, 1933.
- 森 武麿, 「農業構造」, 1920年代史研究會 編, 『1920年代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出版會, 1983.
-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1991.
- 우대형, 「1920년대 한국 미곡생산성의 정체」, 『經濟史學』 25호, 1998. 12.
- 栗原百壽, 『日本農業の基礎構造』, 農山漁村文化協會, 1980.
- 伊藤正直, 「財政・金融」, 1920年代史研究會 編, 『1920年代の日本資本主義』, 東京大出版會, 1983.
-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 제1집, 세광사, 1931.
- 이영훈·장시원·宮嶋博史·松本武祝, 『近代朝鮮水利組合研究』, 일조각, 1992.
- 이홍락, 「식민지기 조선내 미곡유통」, 『경제사학』 19호, 1995. 12.
-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博文出版社, 1949.
-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장시원 외, 『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 전강수, 「일제하 수리조합사업이 지주제 전개에 미친 영향」, 『경제사학』 8호, 1984. 12.
- _____, 「農業恐慌期の 米穀·米價政策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13호, 1989. 12.
-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編, 『朝鮮經濟年報 昭和14年版』, 改造社, 1930.
- _____, 『朝鮮經濟年報 昭和16·17年版』, 改造社, 1943.
- 정문중,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생산력 정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정병욱, 「1918~1937년 朝鮮殖産銀行의 자본형성과 금융활동」, 『한국사연구』 79호, 1992.

- 朝鮮經濟協會, 『朝鮮金融事項參考書 昭和14年版』, 1940.
- 朝鮮農會, 『農家經濟調查』, 1930~1932.
- _____, 『朝鮮農務提要』, 1936.
- _____, 『朝鮮農會報』, 各月號.
- _____,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 朝鮮殖産銀行, 『殖銀調查月報』, 各 月號.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 年도.
- _____, 『朝鮮小作慣行』, 1929.
- _____,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29.
- _____, 『朝鮮米穀要覽』, 1937.
- _____, 『朝鮮農地年報』, 各 年도.
-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昭和8年·13年, 1966.
-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 차명수, 「세계농업공황과 일제하 조선경제」, 『경제사학』 15호, 1991. 12.
- 河合和男, 「朝鮮‘産米増殖計劃’と植民地農業の展開」, 『朝鮮史叢』 2호, 1979.
- Fisher, I., “The Debt-Deflation Theory of Great Depressions,” *Econometrica*, 1, 1933.
- Friedman, M. and A. Schwartz,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Galbraith, J. K., *The Great Crash, 1929*, Boston: Houghton Mifflin, 1954.
- Gordon, R. A., *Economic Instability and Growth: The American Record*, New York: Harper & Row, 1974.
- Griffin, Keith, *The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Change: An Essay on the Green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Hicks, J. R.,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1969(김재훈 역, 『경제사 이론』, 새날, 1998).
- Keynes, J. M.,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 Keynes*, Vol. V, edited by D. Moggridge, The MacMillan Press, Ltd., 1979.
- Kindleberger, C. P., *Manias, Panics, and Crashes—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New York: Basic Books, 1978.
- Klein, B., “Our New Monetary Standard: The Measurement and Effects of Price Uncertainty, 1880~1973,” *Economic Inquiry*, December 1975.

- Minsky, H., *Can "It" Happen Again*, New York: M. E. Sharpe, 1982.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1957(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민음사, 1991).
- Reddy, M. V., "Growing Pains," *The Journal of Earthwatch Institute*, Vol. 14, Issue 5, Oct./Nov. 1995.
- Rocha, J. and D. Restuccia, "The Role of Agriculture in Aggregate Business Cycle Fluctuations," Working Papers from University of Toronto, Department of Economics, Nov. 2002.
- Rochon, Louis-Philippe, "The Creation and Circulation of Endogenous money: A Circuit Dynamique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III, No. 1, March 1999.
- Rosset, P. C., J. Lappe, and F. Moore, "Lessons From The Green Revolution," *Tikkun*, Vol. 15, Issue 2, Mar./Apr. 2000.
- Rothermund, Dietmar, *The Global Impact of the Great Depression*, Routledge, 1996.
- Samuelson, P., *Economics*, 9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73.
- Sylla, R., "Financial Disturbances and Depressions: The View from Economic History," Working Paper No. 47, NYU, April 1991.
- Temin, P., *Did Monetary Forces Cause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Norton, 1976.
- Thiesenhusen, William C., "Green Revolution in Latin America: Income Effects, Policy Decisions," *Monthly Labor Review*, Mar. 1972.
- Vernon, J. R., "The 1920~21 Deflation: The Role of Aggregate Supply," *Economic Inquiry*, Vol. XXIX, July 1991.
- Wray, L. Randall, "The Origins of Money and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Financial System," Working Paper No. 86, 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and University of Denver, March 1993.

[Abstract]

The Debt Deflation of Rice Price in 1925~1931

Jae-Hoon Kim

In this article I aim to analyse the result of the Agricultural Policy in 1920's in Colonial Korea through the market behaviour. Before the Great Depression since 1929 Korea had already suffered from the depression of agricultural prices including the price of rice since 1925. It must be analysed from the both aspects of supply and demand. The rice markets of Japan and Korea were integrated with the rapid increase of rice export from Korea to Japan but the demand for rice was contracted by the economic recession. The Green Revolution Policy of the Japanese Oppressor was a process innovation, so it made the rice price down. The Irrigation Project through the debt impell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made it even worse. It was a debt deflation. In that situation the traditional monetary function of rice was collapsed and substituted by the legal money, so the market value of rice was even more decreased. So we can find the financial instability spreading from the production process.

Keywords: green revolution, process innovation, debt deflation, financial instability, Great Depression

JEL Classification: E3, L7, N1